

울<mark>긋불긋 단풍…마음까지 물들겠네</mark> 시민들이 5일 물감을 뿌려 놓은 듯 울긋불긋한 단풍 나무로 둘러쌓인 5·18시민공원 산책로를 걸으며 가을을 만끽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잇단 터널 교통사고··주범은 '과속'

### 광주·전남 한달새 6건 발생···올들어 43건 진입전 속도 줄이고 안전거리 유지 필수

터널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광주·전남지역에서만 최근 한 달새 6건이 일어났다.

전문가들은 과속이 주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터널 안 상황이 어떤지 모르기 때문에 터널 진입 전에 미리 속도를 줄이고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5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 전 9시29분께 장성군 북이면 호남고속도 로 상행선 원덕터널 안에서 관광버스와 트 럭 등 4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 로 버스 승객과 차량 운전자 등 13명이 크 고 작은 부상을 당해 인근 병원에서 치료 를 받고 있다. 앞서 2일 오후 5시26분께는 순천시 서면 순천-완주간 고속도로 상행선 13.2km지점 서면3터널에서 장모(53)씨가 몰던 25t 트 럭에서 불이 났다. 이 불은 트럭 뒤쪽 타이 어와 적재함 등을 태우고 25분 만에 진화 됐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광주·전남지역 터널 교통사고는 지난달 에만 4건 등 올들어 총 43건이 발생했다.

특히, 지난달 26일 출근길에는 여수시 율촌면 엑스포도로 대포터널에서 두차례 연속 추돌사고가 일어났다. 이날 오전 7시 50분께 대포터널 출구 20m 앞에서 9중 추 돌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신모(58)씨가 몰던 투싼 승용차가 앞서가던 고모(30)씨 의 마티즈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으면서 시작됐다. 신씨의 승용차를 뒤따르던 차 들도 급하게 속도를 줄였지만 연달아 부딪 히며 9중 추돌사고가 발생, 탑승객 5명이 다치고 차량 17대가 파손됐다.

이어 오전 9시께는 9중 추돌사고 지점에서 20m 못 미친 지점에서 또 다시 5중 추돌사고가 일어났다. 박모(36)씨가 운전하던 SM5 차량이 조모(여·54)씨의 승용차를 추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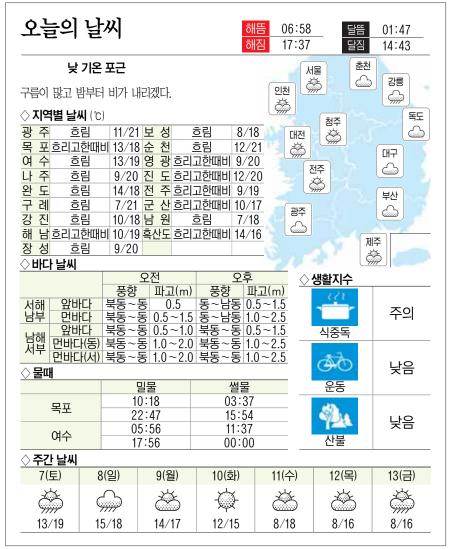
산이 많은 우리나라 지형상 터널이 많고, 그만큼 사고 위험에 처할 수 있다. 터널 사고는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터널 구조상 대피하기가 쉽지 않고 폭발이나 화재로 유독가스가유출되면 잘 빠지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터널 내 교통사고는 2013년 전국적으로 232건, 2014년 263건 등 해마다 증가 추세

다.

전문가들은 터널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과속을 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또 터널에서는 앞 지르기를 해서도 안되고 거리 감각이 무뎌 질 수 있으므로 선글라스도 착용하지 않아 야 한다.

조장섭 전남경찰청 교통안전계장은 "초 보 운전자는 어두운 터널에 진입하면 속도 를 줄이는 반면 대부분의 운전자는 속도 를 유지하려다보니 무리하게 앞지르기를 하게 되고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며 "터널 조명을 밝게 하는 등 시설 개선도 필요하지만, 터널 진입 전 미리 속도를 줄 이는 등 운전자들의 주의가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광주 불법광고물 2년간 160만건

#### 과태료만 42억원…대부분이 아파트 분양 광고

광주시가 최근 2년 간 단속한 불법 광 고물 건수가 무려 160만 건을 넘은 것으 로 나타났다.

부과 금액만도 40억원을 넘는 등 단속 방식도 '수거와 계도'에서 '단속과 제재' 로 전환했다는 평가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올들어 9월 말현재 불법 광고물 정비 건수는 현수막, 입간판, 벽보 등 유동광고물 66만5267 건, 돌출간판 등 고정 광고물 581건 등66만5848건에 달했다.

지난해는 유동광고물 94만5994건, 고 정광고물 731건 등 94만6725건이었다. 2 년 간 단속건수가 161만2573건이다. 하 루평균 무려 2209건이다.

광주시가 지난해부터 불법 광고물과 고단한 전쟁을 치른 것은 성공적으로 마 무리된 광주하계U대회, 국립아시아문 화전당 개관 등 굵직한 행사에 대비해 깨끗한 거리 조성에 팔을 걷어붙였기 때 문이다. 도가 넘을 정도로 너무 난립하 고 있다는 시민의 민원도 강력한 단속에 힘을 보탰다.

단속 광고물의 80~90%는 아파트나 상가 분양 관련 불법 현수막과 술집, 음 식점, 숙박업소 등을 알리는 벽보와 전 단 등이다.

행정처분도 대폭 강화해 과태료 부과 건수와 금액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 463건에 10억1500여만원이었 던 부과액은 올해는 1730건에 무려 32억 2300만원으로 3배가량 급증했다.

불법 분양 현수막을 내건 A건설은 6 억7000여만원, B건설은 5억8000여만 원, C건설은 4억여원의 과태료 폭탄을 맞았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합법적인 게 시대가 태부족한 상황에서 무작정 단속 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광주시 관계자는 "주요 행사장과 대로변 중심으로 단속을 펴는 한편 현수막 게시대 확대, 간판 개선사업 추진 등 단속과 함께 대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동료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제기 조선대 교수 5명 징계

조선대 군사학부 A 교수의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했던 조선대 교수 5명이 감봉 3개월 등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 려졌다.

5일 조선대에 따르면 교육부 교원소청 심사위원회는 최근 학교측이 B·C 교수 등 5명에 내린 징계와 관련된 공문을 발송했 다는 것이다.

조선대는 A 교수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등을 거쳐 B 교수 등에 대해 논문 위·변조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 견책~감봉 3개월까지의 징계를 내렸고 해당 교수들은 이에 불복, 교

육부에 소청심사청구를 냈었다.

교육부는 5명의 교수 중 2명의 교수를 제외한 D·E 교수의 경우 징계 수위를 견책에서 경고로 낮출 것을, F 교수도 학교측 징계수위(감봉 2개월)보다 낮은 감봉 1개월 수준의 징계를 권고했다.

학교는 소청심사청구 결과를 반영, 징계를 내렸다. B교수 등은 지난 2013년 8월 군사학부 A 교수의 공개채용과 관련,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하는가 하면, 원본과 달리 변형이 이뤄진 논문을 원본의 비교 논문으로 삼아 표절 또는 중복게재 여부를 판단하는 등 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광주지법 민사 14부(부장판사 조성필)는 지난해 8월 A(45)교수가 조선대를 상대로 낸 '교수 임용절차 이행 청구' 소송에서 "대학은 A씨를 교수로 임용하는 절차를 이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한 바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선대 한 연구소가 표절 또는 중복게재를 판정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비교 논문이 원본과 달리 변형된 것이어서 판정 결과를 믿기 어렵다"면서 "표절 판단을 의뢰받은 다른 모든 학회, 기관, 교수들도 표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지을기자 dok2000@

#### 31시단 참전용사에 새 보금자리

육군이 6·25 참전용사들에게 새 집을 지어주는 '나라사랑 보금자리' 248호가 탄 생했다. 광주·전남지역에서는 15번째 보

육군 제31사단은 최근 해남군 마산면에서 사는 한국전쟁 참전용사 박동규씨의 부인 최요수(83)씨 집에서 나라사랑 보금자리 248호의 준공식을 열었다고 5일 밝혔다.〈사진〉31사단은 공병대대 장병들과함께 4250여만원을 들여 박씨의 주택을

참전용사 박씨는 지난해 나라사랑 보금 자리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직후 별세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